

룰 전쟁 완승...이재명 등판시점 촉각

이측, '어대명' 프레임 굳히기
오늘 '최고위 권한 조정' 경계
비이재명계, 반격 뾰족수 없어

이 고문 측 핵심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대 룰이 어떻게 정해지는 데에는 여차피 큰 영향이 없었다"며 "핵심은 최고 위 권한 문제다. 이 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져야 이 고문의 최종 결단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당 대표가 개혁을 주도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당권을 잡아와야 뭐하겠느냐"며 "이 고문의 출마 고민에는 그런 부분도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대표 권한 약화안'에 대해 선을 긋기는 했으나 실제 논의 방향이 어떻게 흐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전준위에서 더 토론해봐야 최종 윤곽이 나오겠지만 최고위 권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5대5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준위는 8일 마지막 회의 때 이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전준위와 비대위에서 최고위 권한 강화가 무위로 돌아가더라도 이 고문의 출마 시점은 후보 등록일(17~18일)이 임박해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인사는 "출마 선언을 하면 그 순간부터 다른 경쟁자들이 나란히 네거티브 공격을 할 게 뻔하다"며 "노출 시간을 줄이는 게 오히려 낫다"고 했다.

친명계 당권주자였던 우원식의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며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이재명계로서는 마지막 반격을 꾀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최고위 권한 강화'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고문의 당권행을 저지할 수 있는 '뾰족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당 대표 권한을 다소 약화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에 진문(진문재인)을 비롯한 비이재명계 인사를 많이 진출시킬 경우 차기 총선 공천권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림이다.

다만 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지도체제를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유지기로 한 만큼 최고위원 권한 강화는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계파전 양상으로 치닫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 싸움이 친명(친이재명)계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프레임이 더 굳히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룰 세팅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이재명 안팎의 시선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등판 시점에 쏠리는 가운데 친명계에서는 당내 일각의 '최고 위 권한 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협의'가 아닌 '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이 명문화할 경우 당권이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럴 경우 차기 당 대표의 2024년 총선 공천권 역시 흔들릴 수 있다고 친명계는 보고 있다.

"전 국정원장 고발, 중대 국가범죄"

대통령실 "검찰 수사 예의주시"
반인권·반인륜적 범죄 등 주목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복송사건'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데 대해 국정원의 관련 보도자료 공개 후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고발 관련)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복' 프레임 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탈북어민 복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 데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박지원·서훈 전 원장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고발 조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진상조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공유나 보고됐느냐'는 물음에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보고를 드렸다는 건 저희가 공시하기 어렵다"고 고만 답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첩보삭제, 바보짓 하겠나"

감청기록 삭제 "사실 아니다"
직원들 입단속 "한 적 없다"



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하고도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제를 해봤자 '누가라고 아옹'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메인서버는 물론 첩보를 생산한 생산처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닌가. 우리가 삭제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삭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서버에 들어가 공유문서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삭제를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가려고 하는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누가 있겠나"라고 했다.

조선일보가 이날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관등성명을 북한에다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저도 그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의 원 첩보를 어디서 받은 것인지를 묻자 "국정원법상 얘기를 할 수 없다"면서도 "한미 정보동맹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고 답했다.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에도 "입단속을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국정원 직원들의 보안의식은 저보다 더 철저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개혁된 국정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이런 짓(고발)을 안한다. 과거 직원들이 국정원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김병주 단장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에서 김병주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국정 좀먹는 대통령실 비선정치 좌시 안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는 7일 "국정을 좀먹는 대통령실의 비선정치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가동되는 대로, 또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철저히 따져물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의 비선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가 부속실을 거의 매일 드나들며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견을 정경직 점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신씨가 '여사



강조했다. /연합뉴스

특보'라고 불렀는데, 공식직함이 없음에도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일이 허용됐나. 철저히 조사해 낱알이 밝혀야 한다"고 거듭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시스템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